

정부 내년 예산안, 울어야 할까? 웃어야 할까?



권혁웅
건설경제신문 산업팀장

예산정국이다. 10월 정기국회에 상정된 정부 예산안을 놓고 여야간 대립이 첨예하다.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을 놓고 '국민기만'이니 하며 맹공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복지 공약 축소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면서 축소된 복지공약이 오히려 민주당 안보다 낫다며 반격이다. 매년 정부 예산안을 놓고 되풀이되는 광경이긴 하지만 올해는 복지공약 논쟁이 더해져 정쟁의 수위가 높다. 정부의 예산책정은 태생적으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구조다. 유한한 자원으로 무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책정을 두고 이래저래 말들이 많고 불만이 따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을 놓고 볼때 가장 불만이 큰 분야는 건설산업일 것이다. 정기국회에 상정된 내년 정부 예산안은 357조7,000억원이다. 수입보다 지출을 늘려잡아 25조9,000억원의 적자 예산으로 편성됐다. 건설산업의 관심은 무엇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다. 이 분야의 책정예산은 23조3,000억원이다. 전년과 비교해 4.3%인 1조원 가량이 줄었다. 국내 시장만 바라보고 있는 대다수 건설업체들로서는 실망스런 예산책정이다. 이대로라면 건설업체들의 내년 수주난은 불보듯 뻔하다. 경영자들은 직원들をも 내보내야할 일을 걱정해야할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 9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당시, 건설산업계의 반응은 의

외였다. 건설산업을 죽일 것이냐며 반발하고 격앙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순순히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오히려 그나마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곳곳서 포착되기도 했다. 정부는 몇개월전 공약가계부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복지수요의 증가로 인해 SOC예산의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공약가계부대로라면 내년 SOC 예산은 올해보다 3조원 정도 줄어든 21조3,000억원 선이다. 그런데 3조원 줄 것으로 예상했던 SOC예산이 1조원만 줄었다. 그렇다면 예상했던 것보다 2조원의 물량이 내년에 더 나온다는 의미다. 어렵기야 하겠지만 최악은 면했다는 것이 건설산업계의 솔직한 심정이다.

더욱이 정부는 복지공약을 수정하면서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뒀 예산안을 편성했다. 지난해 대선 이후 SOC예산은 복지예산에 늘려 기를 펴지 못했다.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기 전만 해도 SOC 예산의 대폭 감축은 기정사실이였다.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복지공약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큰 폭으로 복지예산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복지공약을 수정해 당초 예상보다 복지예산의 증가율을 낮췄다. 대신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로 예산을 돌렸다. SOC 예산의 감소폭을 줄이고 일자리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7.7% 늘린 것이다. 복지공약이행을 위한 재원도 기본적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경제계에서는 그동안 맹목적인 복지정책의 확대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애다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생산인구가 큰

고민거리다. 이런 상태에서 포퓰리즘적 논리만을 따져 생산성이 떨어지는 분야와 계층으로 부를 재분배하는 것은 잘못하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복지비용을 늘리는 악순환의 시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최선의 복지는 거시경제를 안정시키고 고용시장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해 내는 것이다. 이렇게 창출된 일자리를 통해 개개인은 자신의 능력에 걸맞은 임금을 받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기본적인 복지다. 여기에 경제성장을 통해 늘어난 세수는 증세없이도 복지정책의 확대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것이 생산적 복지다.

복지국가 초입단계인 우리나라에서는 복지가 새로운 도전이지만 복지국가의 길은 이미 많은 국가가 거쳐간 길이다. 또 많은 국가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겪었고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다. 최근에는 복지 선진국들이 파산지경에 이르는 일도 벌어졌다. 이들 국가의 추락은 정부가 경쟁력있는 산업을 육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표를 얻기 위해 과도한 소비성 복지에 치중한 결과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정부의 내년 SOC예산 편성만을 놓고 보면 건설산업계는 당연히 울어야한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기조가 다시 경제 활성화에 모아졌다는 점은 국가적으로나 건설산업계로 볼 때 다행스러운 일이다. 과거 역대 정권에서 건설산업은 항상 경제활성화의 최선두에 자리했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건설산업계는 내년이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정부 예산안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는지 모른다. 